

지역발전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균특회계 지원 영남 편중 불보듯... 호남 낙후 심화

광역 개발 무게 ... '균형발전' 용어 삭제 선도사업도 영남 10개·호남 5개 불과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호남의 위기'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경제권 계획이 영남을 2개의 경제권으로, 호남을 1개의 경제권으로 구성하는 등 지역적 낙후도를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남에 기반하고 있는 민주당도 집권에 실패하고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역발전특별법의 수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발전특별법 문제점 = 무엇보다도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보다 낙후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핵심인 반면 이를 대체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은 광역경제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호남의 낙후를 오히려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발전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가 전면

삭제된 상황이다.

당장,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호남은 1개의 광역권으로, 영남은 2개의 광역권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도 호남은 5개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10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도 광역계정과 지역계정으로 나뉘어 따라 호남권에 배정되는 예산은 줄어들지만 2개의 광역권으로 나뉜 영남권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더 배분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 =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체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회동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

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지역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특별법의 수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의 대응 = 일단 광주시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전남도에서도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의 내용 수정을 위해서는 운영

공통체라는 입장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각에서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회동을 갖고 두 사람이 함께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방문, 지역발전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가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실과 서무담당과 5개 구청 감사실, 공사와 공단 관계자 등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조사 착수 회의를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국 정상화 물꼬 트나

여야 직불금 국조 합의로 숨통 ... 낙관은 일러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여야 세 교섭단체가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쌀 직불금 파문, 정치사찰 논란 등으로 경색된 정국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동 직후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3당은 쌀직불금 불법 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금융위기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과 그와 관련된 각 당 요구사항에 대해선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이 협의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 퇴진, 2009년도 예산안 수정 등 민주당의 전제조건을 21일 정책위의장단 회동에서 다루기로 했으나 애초 이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으로서 한발 후퇴한 모양새가 됐다.

선진과창조모임 측이 은행권에 대

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 즉각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전제조건 수용과 별개로 이 사안은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국조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여 22일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쇠고기 국조에 이어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국조가 된다.

이처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인 쌀 직불금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하에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경색 일변도로 흐르던 정국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아직 낙관은 이르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치사찰 논란과 민주당이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요구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작년 감사 6개월 앞당기고 결과 비공개” 커지는 盧정권 직불금 의혹

지난해 쌀직불금 감사 당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가 작년 3월 초 직불금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작년 9월 실시하려던 직불금 감사를 3월 21일로 앞당겼으며, 5월 감사종료 이후 청와대가 감사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직불금 감사 비공개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황만 무성할 뿐 당시 상황과 관련된 인사들은 한결같이 청와대의 은폐 지시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감사를 3월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감사원이 8-9건의 감사리포트를 협의했고, 그 중 하나가 직불금 감사였다는 여론의 주장도 제기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어 5월 15일 감사를 종료한 뒤 청와대 국정상황실, 민정수석실, 농어촌비서관실에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 당시 감사원 김조원 사무총장이 참석해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현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은 진노하면서 농림부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회적 과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감사결과 공개유보를 결정했다는 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남은 정점사황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직불금 감사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정황증거는 다 드러났고, 청와대 개입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백만 남았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접촉했던 김조원 전 사무총장, 하북동 전 제1사무차장, 담당 국장은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스

■ 지역 직불금 부당 수령의혹 조사

농가들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전남도가 20일 고위 공무원과 정치권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행 제도나 인력 운용상 실경작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도에 내려보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자진신고에 바탕으로 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각 실과 서무계장과 5개 구청 감사실, 공사와 공단 관계자 등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회의를 갖고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직불금을

대상 많고 실경작 확인 어려워 ‘용두사미’ 될라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시는 22일~24일까지 공무원들의 자진신고서를 접수받아 분석작업을 마친 뒤 오는 27일 행정안전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나온 쌀 직불금 조사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도 본청과 일선 시군에 대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인원이 너무 방대한 데다 실경작 여부를 현장 조사할 인력마저 소수에 그쳐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경우 분청 인력과 5개 구청 공무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 실태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이를 담당할 일선 구청 공무

광주·전남 쌀 직불금 의심사례 (2005~2006년)

	광주시	전남도
농지전용	570건 (80.4ha)	4만6천727건 (2천727ha)
면적초과	3천530건 (282ha)	7만5천173건 (4천400ha)
지번불일치	1천219건 (388.46ha)	4만9천439건 (1만5천288ha)
계	5천319건 (751ha)	17만6122건 (2만2천155ha)

(농식품부가 지난 2월 광주·전남도에 보낸 자료)

원은 1~2명 선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2월 농식품부가 시·도에 통보한 '2005~2006년 광주·전남 지역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사례'가 광주 5천319건, 전남

17만6122건 등 총 17만5천931건에 달하고 있으나 시·도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는 각각 339건, 665건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실경작이나 부당수령에 대한 판단기준도 모호해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농가에서 흔히 운용되는 '대행경작'의 경우 비경작자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규정상 경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비료매입 영수증 등을 갖춘 관의 경작자는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 농지원부 등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한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해 일일이 현장확인이나 주위 농민 대상 청문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인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것이라는게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화순무지개요양병원

내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피서와 번거스러움 없이
자립 생활과 의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실부터 24시간 진료 | 1인실부터 24시간 식사

문의전화: **370-0700**

365일 운영합니다